

국무조정실

우110-760 /종로구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1004호 /전화 730-5400 (행)3859 /전송 737-0109
총괄조정관실 기획심의관실 과장 이병진 사무관 김진남

문서번호 국무총괄 01100 -32호

시행일자 2001. 2. 3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기획관리실장

| | | | | |
|------|-----|--------|------|--|
| 보존기간 | 5 년 | 국무조정실장 | 국무총리 | |
| 공개여부 | 공 개 | 수 조 | 조 | |
| 조정관 | 김민환 | | | |
| 심의관 | 이병진 | | | |
| 과 장 | 이병진 | | | |
| 기안자 | 김진남 | | | |
| 심사자 | 이진수 | 심 사 일 | 2. 3 | |
| | | 협조 | | |

제 목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책조정방향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2001- 1 호)

1. 2001. 1. 29 정부조직이 개편되어 지난해 8월 출범한 주무장관 체제가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됨에 따라 분야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조정 업무를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 음

- (1) 총리실과 주무부처가 정책조정에 관해 역할분담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총리실은 여러부처에 걸친 주요 국정과제, 분야별 팀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정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국가적 과제와 행정수요의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는 분야별 정책과 법령을 책임지고 조정
- (2) 국정전반을 다루는 국무회의·차관회의 및 주무장관회의와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는 분야별 장관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법령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을 거침으로써 운영을 효율화 해 나가고,
주무장관회의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범정부적 과제나 현안문제를 조율하고, 국정전반에 대해 주무장관간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로 활용

(3)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정책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주요정책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감독기능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각 부처는 총리실에 조정을 의뢰하기전 관계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선행하는 한편, 소관 정부투자기관간,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간 이견사항을 정부투자기관 감독기능을 통해 책임있게 조정

- (4) 주무부처 등은 정책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철저히 적용
- (i) 정책조정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무총리의 내각운영방향, 국정지표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
 - (ii) 관련기관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종위원회 민간위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조정의 객관성 확보
 - (iii)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되, 다수 국민의 이익과 공익을 우선하고, 소외계층 등에 대해 최대한 고려
 - (iv) 인력,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인력충원 가능성, 예산조달방법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2. 아울러,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중 신설된 부총리의 분야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총리에게 위임가능한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위임하고, 목적달성이나 여건의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해 나가기 바랍니다.

붙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책조정 방향 1부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23~31,41~58)